

국민의힘, 의총서 김용태 거취·당 개혁안 두고 ‘갑론을박’

임기 이달 말까지… 연장 가능성도 거취 관련 의견 모아지지 않아 새로운 원내대표 따라 달라질 수도 다양한 의견에 방향 정하기 어려워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고강도 당 쇄신 방안을 밝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 전당대회 개최 시기, 당 개혁방안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의총 자유발언에 나섰고, 쉬는 시간까지 가지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저는 어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대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쫓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국민과 당원께 책임 있는 개혁안을 말씀드렸다”며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희망을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8일) 9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이 채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임기가 이달 30일까지인 김 비위원장은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의원 모임을 갖고 의원들의 다양한 입장을 모아 김 비대위원장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 성원 의원은 “김 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이를 취합해 김 위원장에게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단순한 거취 문제뿐 아니라 당의 쇄신 방안 관련 의견도 취합해 김 위원장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도 회

동을 가졌지만, 뜻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자는 의견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임기가 연장되더라도 개혁안과 혁신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무 감사와 관련해서 “저는 반드시 당무 감사를 해서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인 8월에 새 지도부가 출범해야 한다면서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의총 자유발언 후 퇴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천운(윤석열) 성향의

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 빨리 물러나라고 하는데, 저는 김 위원장이 혁신안을 낸 것이 당을 살리고 지방선거를 잘 대비할 수 있는 혁신안이라고 생각하고 임기를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했다.

4선 박덕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의 임기가 6월말까지만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선출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의총에서 거취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후보 교체 관련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의총장을 빠져나가면서 “당대표 선거를 가급적이면 빠르게 하라는 의견이 많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의총장에서 나와 전반적으로 김 위원장이 잘 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사퇴하라는 의견은 소수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제28회 무안꽃제 축제

여름이 커지는 순간, 무안에서
무안 SUM : ON

6.26. - 6.29. 무안군 회산백련지

주최 무안군 주관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

THE 28TH MUAN LOTUS FESTIVAL

민주당, 오는 13일 중앙위서 ‘결선투표제’ 도입 안건 상정

당 대표 선거·최고위원 보궐선거
당원 주권 강화 방안으로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에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의 건을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 개정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전준위(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후보자 등록 개시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둘째,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방안이다. 셋째,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중앙위 100%에서 중앙위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하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세번째 당헌 개정 사안에 대해 “당원 주권 강화 방안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반영 비율을) 바꾼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에 따른 추가 당규 개정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대통령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와 수석최고위원이 공석이 됐다.

당에서 전당대회 실무를 담당할 전준위의 위원장은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소병훈, 송옥주 의원이 역할한다. 전준위는 총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7월이나 8월 초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논의됐냐는 질문에 “그러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전준위에서 관련 당헌·당규 절차와 당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 대표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관해 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원내대표는 결선투표를 하고 있다”며 “당 대표 선거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와야 당무 수행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두 인물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평가받는 가운데,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친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원내대표로 추대됐고, 정 위원장은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맡았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오는 13일에 열린다.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태홍 기자